

2015-2025 한국인의 대미 인식 분석

정 상 미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ISSN : 2005-7008

이 글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매주 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 세미나에서의 논의를 참고로 하여 저자가 작성한 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25. 6. 27.

발 표 정상미 국립외교원 지정학연구센터 연구교수

토 론 민정훈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이상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발 행 일 2025년 7월 28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편 집 옥자수 연구원

발간등록번호 11-1262124-100040-01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우)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http://www.ifans.go.kr>

E-mail: ifans@mofa.go.kr

이 문건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열린 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2015-2025 한국인의 대미 인식 분석

CONTENTS

문제 제기	01
대미 인식 개괄 (2015-2025)	02
주요 현안 여론 검토	06
관찰 및 고려사항	19

1. 문제 제기

» 한국인들의 대미인식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긍정적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 한미관계 전망과 장기적 중요성에 대한 회의적 여론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

»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신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한미군사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며,¹⁾ 대외정책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

» 대중의 여론이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여론은 정책 결정자들이 선택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제한하고,²⁾ 정책수행에서의 추진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한국인이 상대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해당국과의 협력 정책의 추진 동력 및 정책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고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인의 대미인식을 살펴보고, 특히 현 시점 한국이 직면한 주요 현안인 미·중 전략경쟁, 관세 문제, 주한미군, 핵무장 여론, 방위비 분담금,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된 국민 여론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대미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1)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6월 4일,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7575>.

2) Richard Sobel, *The Impact of Public Opinion on U.S. Foreign Policy Since Vietna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 대미 인식 개괄 (2015-2025)

가. 대미 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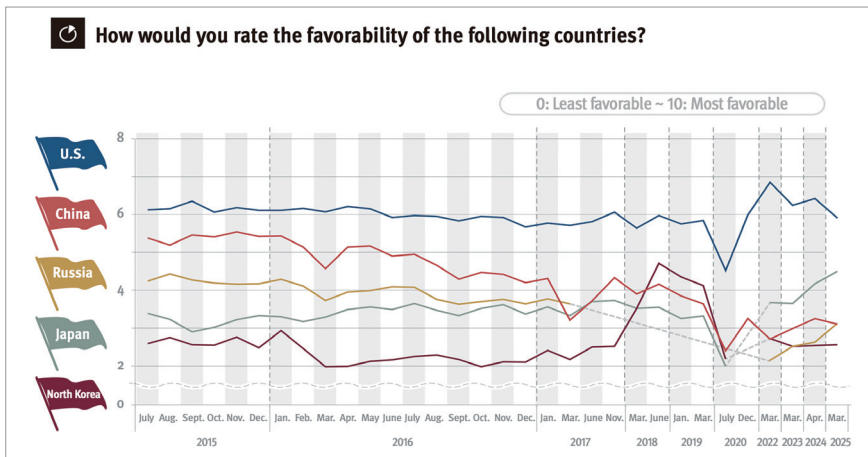
≫ 한국인들은 미국에 대해 다른 주변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호감도를 보여왔음.

- 1990년대 주한미군 범죄사건,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 사건, 2008년 광우병 파동 등의 사건이 미국 호감도 하락으로 이어졌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2010년대에는 우호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음.

≫ <그림 1>에 제시된 한국인의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음.

- 2013-2015년 한중 간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로 일컬어지던 시기에도 미국 호감도는 중국 호감도보다 높게 집계되었음.

<그림 1> 주변국 호감도 (2015-2025)



*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5," p.8.(2025)

» 이러한 주변국 대비 상대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후반부터 기간 미국 호감도는 미세한 수준에서 등락을 경험함.

- ▲오바마 2기 안정적 유지 (2015-2016), ▲트럼프 1기 말 (2019-2020) 감소 경향, ▲바이든 시기 (2021-2024) 회복 및 안정적 유지, ▲트럼프 2기 시작과 함께 호감도 감소 (2025.4)

» 트럼프 행정부 1기 (2017-2020):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 대미 여론 악화에 기여함.

- 2019년 1월, 제10차 SMA 협상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 한미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2019년 2월, 1년 기한 협정을 도출함.

- 2019년 7월, 미측이 분담금 총액으로 10차 SMA (1조 389억원)의 다섯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한다고 보도됨.³⁾

- 2019년 9월 이어진 11차 SMA 협상은 협의 시작 1개월 만에 파행 국면을 맞았고, 결국 2021년 3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최종 타결됨.

-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모든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 감소가 관찰됨.

트럼프 행정부 1기 (2017-2020):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고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 대미 여론 악화에 기여함

3) 이유정, “불편 향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5조원 요구,” 중앙일보, 2019년 7월 30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39069>.

» 바이든 행정부 (2021-2024)

- 대선 직후인 2020년 12월부터 호감도 상승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높은 호감도 유지 (아산: 6점대 이상).

» 트럼프 행정부 2기 (2025~): 2024-25년 시기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하락함.

- 아산정책연구원 (10점 만점): 2024년 4월 6.42에서 2025년 4월 5.92로 하락
- 한국리서치 (100점 만점): 2025년 1월 59점으로 출발해 트럼프 집권 3개월 만인 4월에 50점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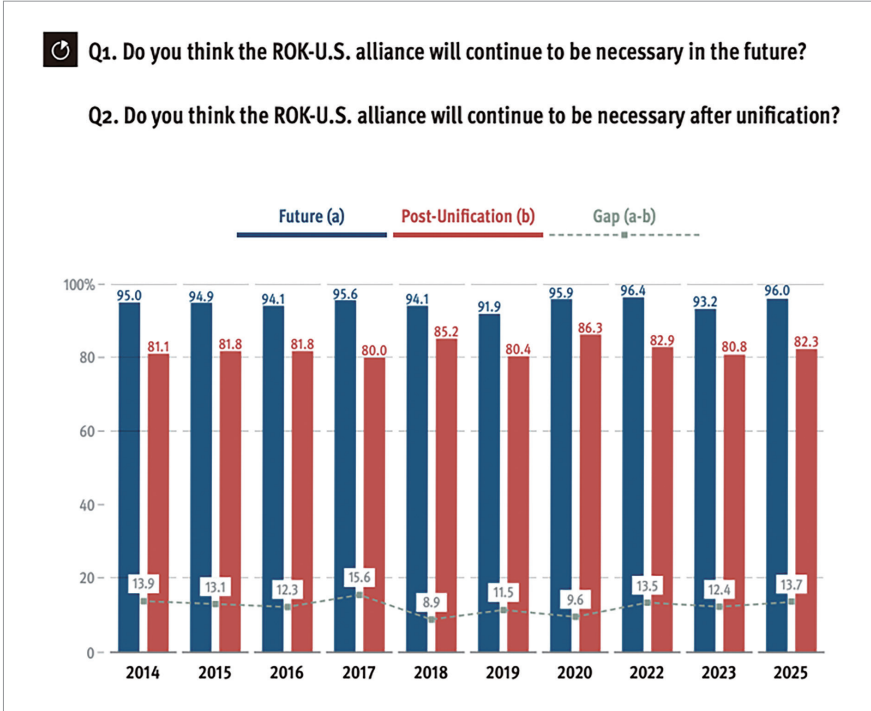
» 호감도 하락 영향 요인: 트럼프 1기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협상 파행이, 트럼프 2기는 관세협정 및 불안정한 대외정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임.

나.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 한미동맹의 필요성: 대미 호감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지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96%로 집계됨.

- 통일 후 필요성: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지속적으로 80% 이상으로 집계됨.

〈그림 2〉 한미동맹 필요성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5,” p.14

3. 주요 현안 여론 검토

가. 미·중 전략 경쟁

» 미·중 경쟁 전망: “10년 후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가 더욱 강력해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2025년 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53.2%가 미국, 34.1%가 양국 간 균형, 12.7%가 중국을 선택함.⁴⁾

» 미·중 경쟁 상황에서 한국의 파트너 선택: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025년 85.8%가 미국을 선택해, 압도적 다수가 미국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음.

-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중국을 선택한 응답자는 2015-2016년 30%대에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한 자리수를 기록했으며, 2023년부터 10%대 중반으로 소폭 회복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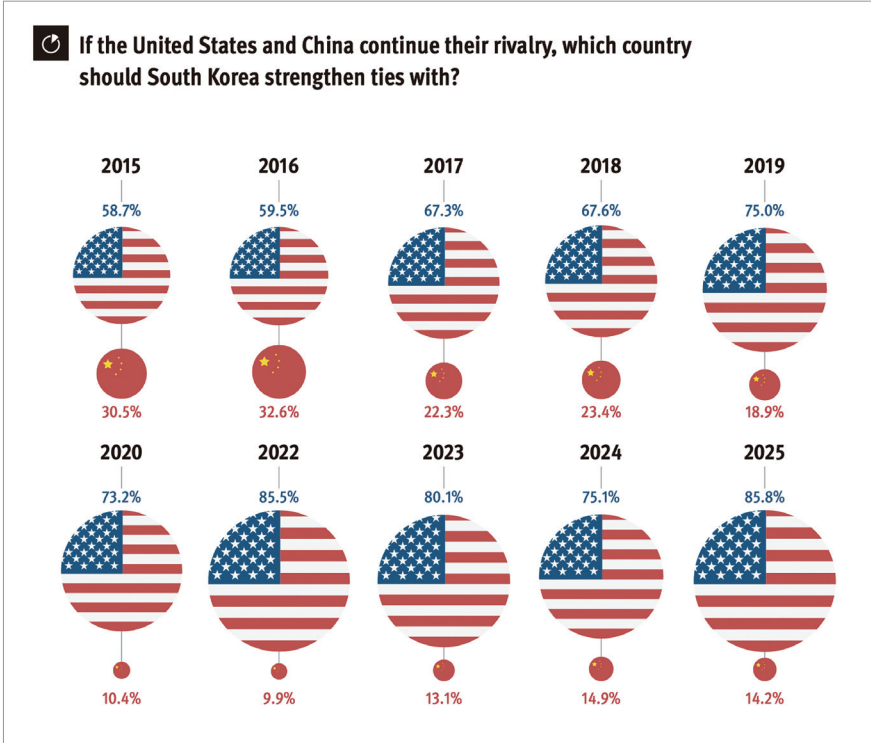
미국은 안보 파트너로서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2025년 74.4%), 경제 파트너로서도 2017년 이후 중국을 추월해 2025년 최고치인 74.2%를 기록함.

» 분야별 파트너 인식: 미국은 안보 파트너로서 2015년 이래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2025년 74.4%), 경제 파트너로서도 2017년 이후 중국을 추월해 2025년 최고치인 74.2%를 기록함.

- 이는 2016-17년 사드 갈등이 일회성 외교 분쟁을 넘어 한국 국민의 대중 인식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했음을 시사하며, 외교 갈등의 여론에 대한 장기적 파급력을 보여줌.

4)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5,” p.20

〈그림 3〉 한국의 미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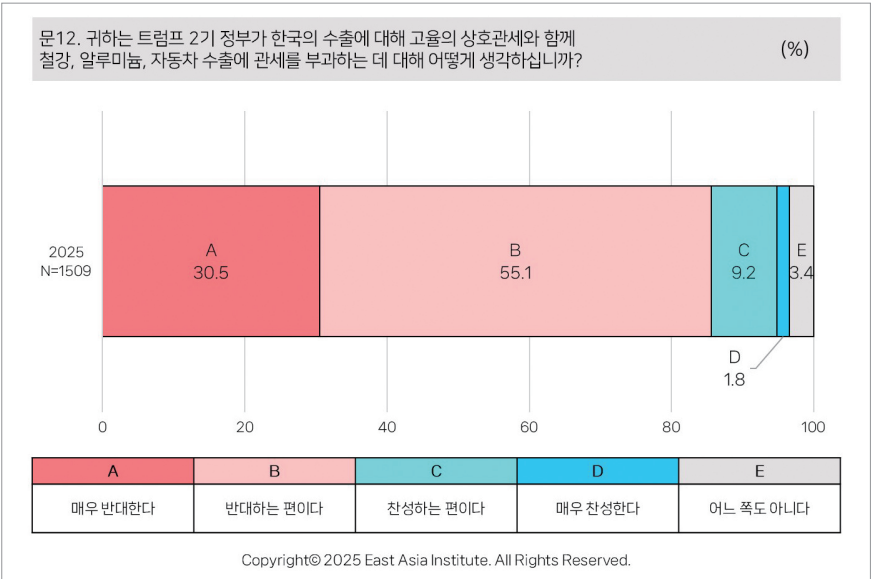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5," p.21

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4월 2일 발표된 상호관세 조치로 한국에는 566억 달러 규모의 수입액에 25% 관세가 적용됨.⁵⁾

5) 강구상, 김혁중, 박은빈, "트럼프 2기 상호관세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5.4.9.) 대외정책연구원

〈그림 4〉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한 찬반



*출처: 손열·박한수,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 국민 반응: 2025년 EAI 조사에서는⁶⁾ 응답자의 85.6%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미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79.9%가 “무역, 관세 등에서 다른 나라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를 꼽았음 (전년대비 +45.5%).

● 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함 (2024: 17.1%→2025: 75.5%).

응답자의 85.6%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

6) 손열·박한수, “[EAI 여론브리핑]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동아시아연구원, 2025년 6월 12일,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확산되어, “미국이 한국의 대중국 무역·투자관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전년 대비 15.4%p 증가함(55.4% → 70.8%).

다. 주한미군 필요성과 전략적 유연성

»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조정 논의: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수뇌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주한미군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조정론자들은 한국배치 전력이 북한 억제라는 특정 임무에 고정되어 전략적 유연성이 제한되고, 중국 단거리 미사일 사거리 내 대규모 전력 집중의 위험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⁷⁾

-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4,500명을 인태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1기 당시의 기초를 반복하고 있음.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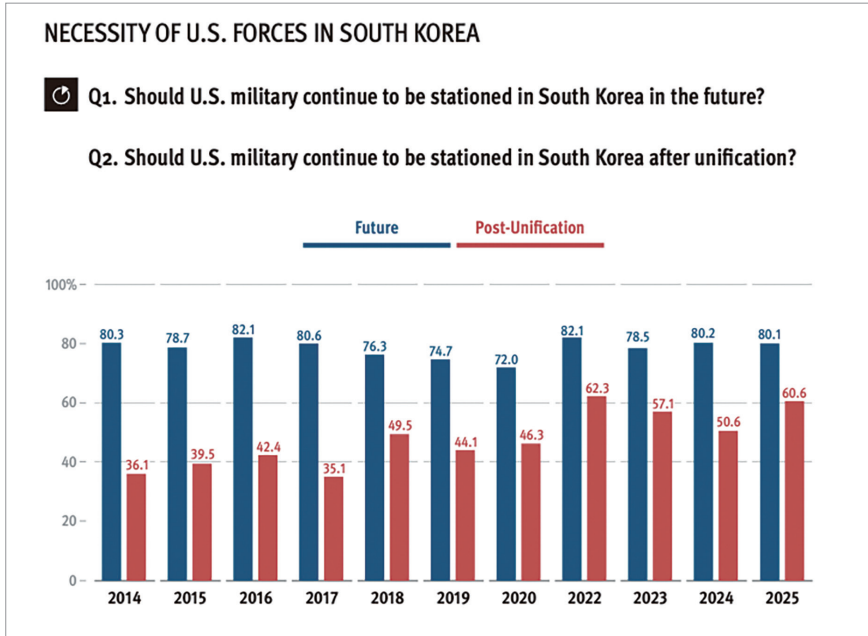
»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한 한국 여론: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국민의 72~82.1%가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 통일 후 주한미군 필요성: 2014년 35.1%에서 2025년 62.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이후부터는 과반 이상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 이는 한국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단순히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 지역 안정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7) 최우선,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 전망과 한미동맹,”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5-1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년 7월 2일), p.16.

8) “U.S. Considers Withdrawing Thousands of Troops From South Korea,” (2025.5.23.)<https://www.wsj.com/world/asia/u-s-considers-withdrawing-thousands-of-troops-from-south-korea-725a6514>

〈그림 5〉 주한미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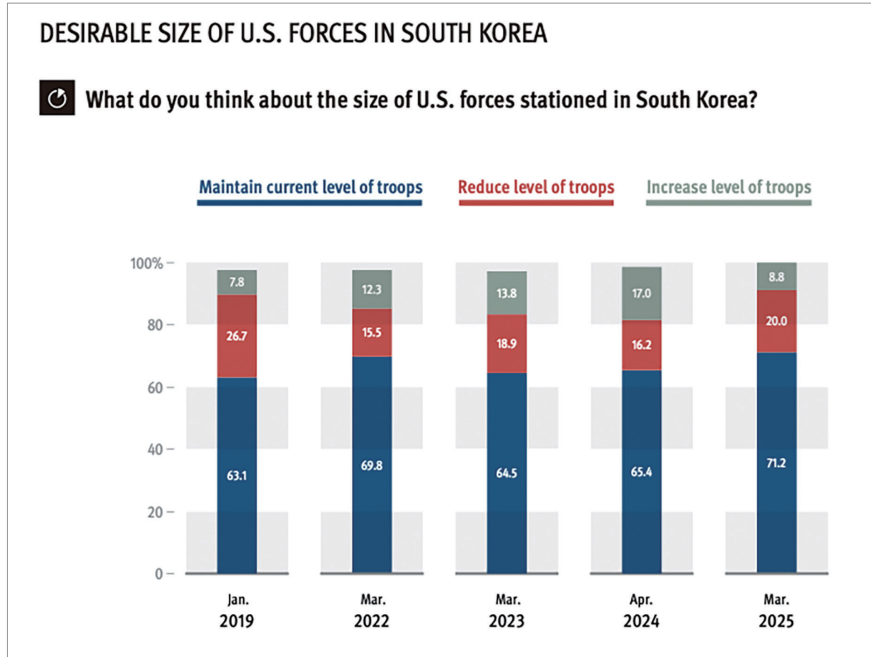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5,” p.15

➤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선호: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일관되게 “현 수준 유지”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63.1~71.2%).

- 2025년 조사 결과: 71.2%가 현 수준 유지, 20%가 감축, 8.8%가 증원을 선택하여 현상유지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시기별 변화 양상: 2019년 방위비 부담금 갈등 당시 감축 선호도가 26.7%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에는 20%까지 하락함. 반면 현 수준 유지 선호도는 2019년 63.1%에서 2025년 71.2%로 꾸준히 증가함
- 방위비 부담금 논쟁과 같은 한미 간 갈등 이슈가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여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유사한 논쟁 재점화 시 여론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6〉 주한미군 규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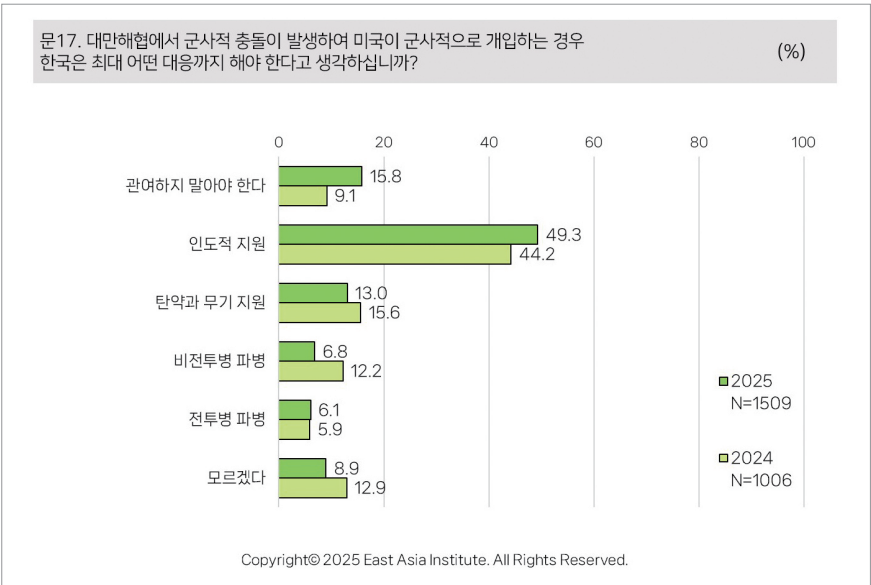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5," p.16

»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 및 통일 후 주한미군 필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론자들은 전력 분산 배치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식 차이가 향후 한미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조율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반면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론자들은 전력 분산 배치를 통한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어, 이러한 인식 차이가 향후 한미 안보 협력에서 중요한 조율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대만 문제 관련 인식: 대만해협에서의 긴장과 갈등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2025년 87.5%의 응답자가 중요하다고 답변함 (EAI 2025).⁹⁾

〈그림 7〉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시 한국의 대응



*출처: 손열·박한수,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 미국이 대만해협 충돌이 발생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입장이 49.2%로 1위,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가 15.8%로 2위를 차지함.
- 대만해협 군사적 충돌 시 주한미군의 역할: “한반도 내에서 대만 군사작전에 대한 후방지원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2.3%, “북한의 군사 도발 억제 및 한국 방위에만 집중”이 29.5%로 2위를 차지함.

9) 손열·박한수,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 종합하면, 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관여 및 주한미군 역할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주류라고 이해할 수 있음.

종합하면, 대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한국의 관여 및 주한미군 역할은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주류

라. 방위비 분담금

≫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사전 우려와 현실화:** 2024년부터 다수의 국민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방위비 분담금 증대와 미국의 방위공약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대중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켜 왔음.

● 2024년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 다수는 트럼프 당선 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77%), 주한미군 감축·철수(51.1%), 한미동맹 파기(31.7%)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함.

● 2025년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 장관은 2025년 4월 NATO 회의와 5월 상그릴라 대화에서 동맹국들의 GDP 5% 수준 국방비 증액을 요구함.

≫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 여론:** 2019-2020년 통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한국인들이 방위비 분담금 현상유지를 선호하였으며, 약 25%는 감액을 지지함. 분담금 증액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2019년 3.7%, 2020년 3.5%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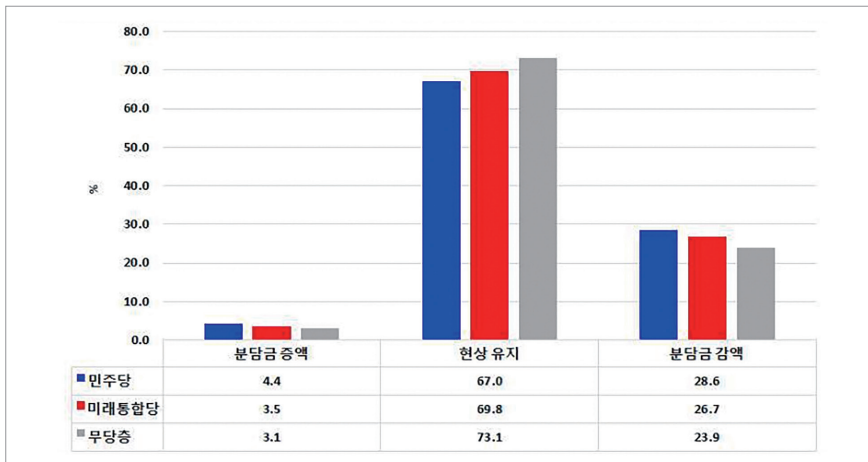
● 2019년 YTN 조사에서도 미측의 17.7%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58.7%가 반대, 25.8%가 찬성 의견을 표명함. 주한미군 감축·철수 위협이 있더라도 52%가 증액 반대 입장을 유지함

● 이러한 입장은 지지정당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견으로 집계됨.

≫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철수를 예상하는 응답자일수록 자체 핵무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한미관계 불확실성이 핵무장 여론 확산과 동맹 기반 안보 전략에 대한 회의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과거 여론 동향은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방위비 분담 문제가 국내 대미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다시 부상할 수 있음을 시사함.

〈그림 8〉 지지 정당 별 주한미군 분담금 여론 분석



*출처: 이상신, “한 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국 여론”, 2020, 5쪽.

마. 확장억제 신뢰성 및 핵무장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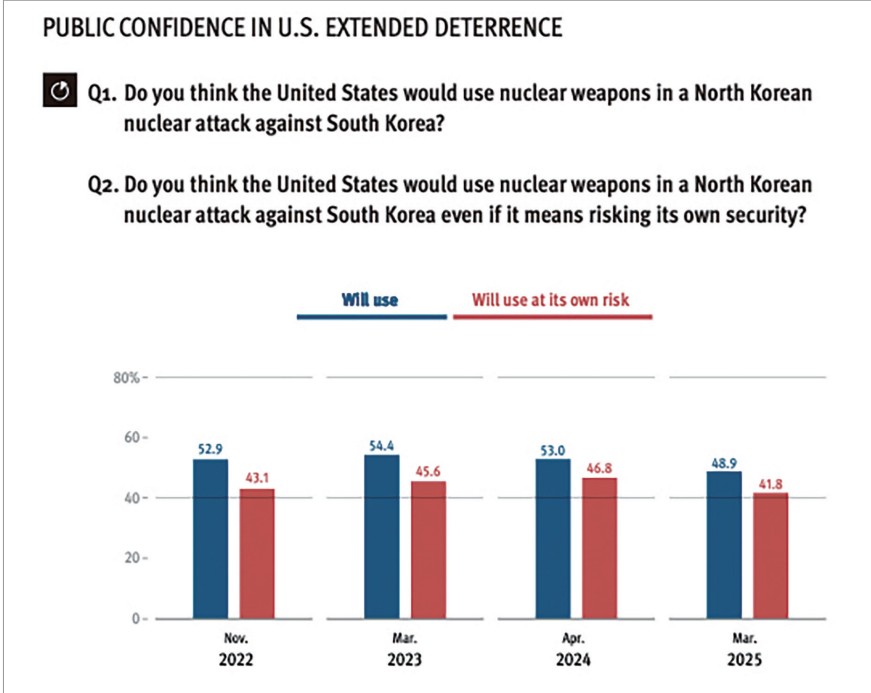
≫ **자체 핵무장 vs. 확장 억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전 보장을 제공하여 핵무장 동기를 차단하는 한편, 안보 공약 철회 위협을 통해 동맹국들의 독자적 핵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동맹국 내 핵확산을 방지해 옴.¹⁰⁾

10) Nicholas L. Miller, “The Secret Success of Nonproliferation Sanc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68, no. 4 (2014): 913-944; Gene Gerzhoy, “Alliance Coercion and Nuclear Restraint: How the

●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재부상한 미국 우선주의, 동맹 정책의 불확실성, 주한미군 조정 논의 등은 미국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 감소와 자체 핵개발 지지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확장억제 신뢰도 변화: 2025년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48.9%가 “그렇다”고 답변, 전년도보다 4.1% 감소함.

〈그림 9〉 확장억제 신뢰도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25,” p.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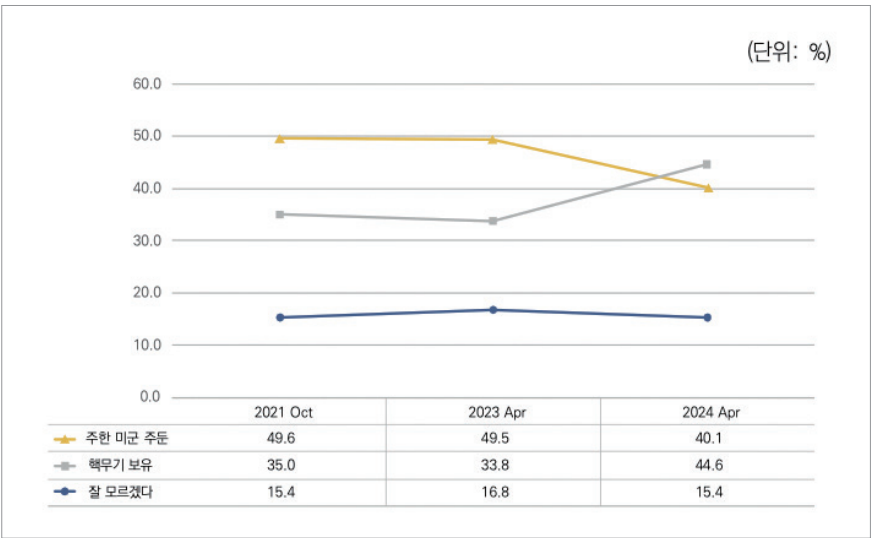
United States Thwarted West Germany’s Nuclear Ambitions,” *International Security* 39, no. 4 (2015): 91–129.

» 한미동맹 파기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지지 확산: 핵개발 시 한미동맹 파기 및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인지하는 응답자가 약 60%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지지하는 비율이 2023년 37.2%에서 2024년 45%로 증가함.

» 주한미군 vs 핵무기 선택에서의 변화

- 2024년 처음으로 국방을 위한 선택에서 ‘핵무기 보유’(44.6%)가 ‘주한미군 주둔’(40.1%)을 앞서며,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약화와 핵무장 지지 강화를 시사함.

〈그림 10〉 주한미군과 핵보유: 2021-2024



* 출처: 이상신 외 『2024 KINU 통일인식조사』, 2025, 259쪽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감소 및 자체 핵무장 지지 증가가 관찰되고 있음.

- 최근에는 한미동맹 파기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신뢰도 및 확장억제 신뢰도 감소가 지속될 경우,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최근에는 한미동맹 파기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핵개발을 지지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바. 한미일 안보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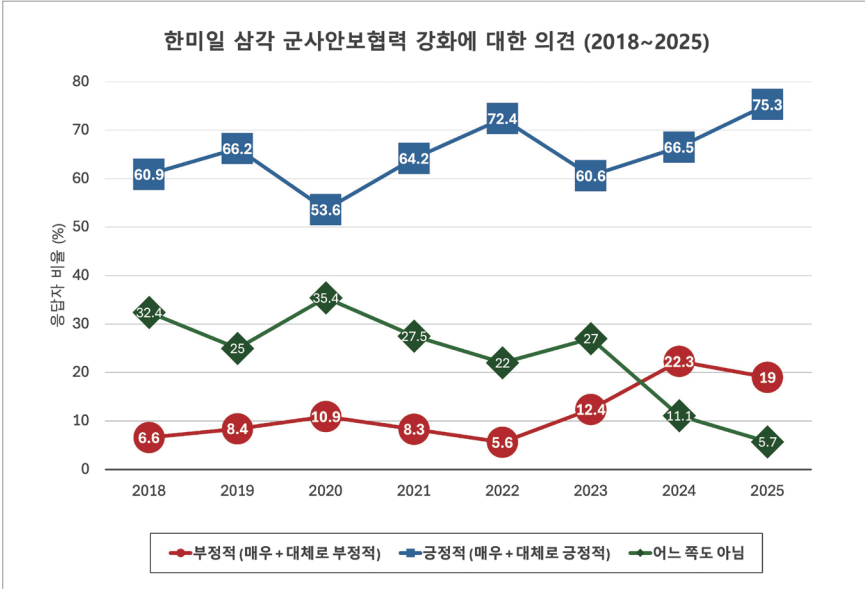
» 동아시아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8-2025년 기간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평균 65%에 달하며, 부정적 의견은 평균 11.7%로 집계됨.

-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의 갈등국면에 처했던 2018-2021년 상황에서도 62%가 긍정적 입장을 표했음.

- 2023년 이후로는 유보적 입장 응답자가 줄어들면서 이것이 각각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분화되는 경향을 보임.

- 정권 교체 직후 실시된 6월 4-5일 조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찬성 의견이 역대 최고치인 75.3%를 기록한 것은, 행정부에 상관없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보여줌.

〈그림 11〉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관한 의견 (2018~2025)



* 출처: EAI 여론조사 결과 (2018~2025) 종합하여 저자 작성

북핵 위협의 증대, 북·러 밀착,
미중 경쟁 심화를 목격하면서,
구조 수준의 압력이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신뢰성 약화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의 증대, 북·러 밀착,
미중 경쟁 심화를 목격하면서, 구조 수준의
압력이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협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4. 관찰 및 고려사항

» 우호 여론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대미 설득

- 한국 내 미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과 안보 불안 증대는 한미동맹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부정적 여론은 미국의 전략적 입지, 동맹 유지 비용,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의 수용성,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효율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측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 국민 여론의 흐름을 고려한 동맹 운영과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 미측과 조율이 필요함.

부정적 여론은 미국의 전략적 입지, 동맹 유지 비용,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의 수용성,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의 효율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미측과 소통할 필요가 있음.

가. 미·중 경쟁 대응

»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기회: 미국을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여론의 압도적 지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여론 변동 가능성: 향후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타격이 발생하고,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 국방비 부담·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면, 미국에 대한 호감도 하락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인 신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재의 높은 대미 선호 여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안보·경제 협력 성과를
통해 국민들이 한미 관계의
실질적 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의 높은 대미 선호 여론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안보·경제
협력 성과를 통해 국민들이 한미 관계의
실질적 이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대미 접근: 현재 국민들의 높은 대미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조성되어
있음. 이러한 견고한 여론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현안에서 상호 이익을 고려한
협력적 접근이 중요함.

● 대미 인식은 구체적 현안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한 해결이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더욱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접근: 국내적으로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통해 대중국 협력의
효용성을 입증하며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 대미 접근: 관세 조치로 인한 급격한 여론 악화가 미측의 전략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관세 완화와 연계한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안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접근: 관세 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노력을 공유하여 국익 보호 의지를 보여주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체적 소통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 주한미군·전략적 유연성

» 한국 국민의 주한미군 관련 압도적 현상유지 선호 의견과 (71.2%)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계획 간 괴리는 급격한 현상 변경 시 국민의 안보 불안 및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대미 접근: 현 주한미군으로 미측 입장에서 갖는 전략적 이득을 근거로 정책 안정화가 필요함을 설득해야 함.

- 현상 변경이 진행될 시에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감군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 그룹 내실화 및 한미 억제 역량 현시 등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상 변경이 진행될 시에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및 감군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한·미 핵협의 그룹 내실화 및 한미 억제 역량 현시 등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접근: 미측이 주한미군에 대한 현상변경을 추진할 경우, 한·미 핵 협력 강화 및 한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 한미동맹 체제 내 역할 확대를 통한 안보 역량 보완 등을 시행해 이를 강조하고, 국민 여론을 고려한 점진적 조정으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라. 방위비 분담금

≫ 2019년 방위비 분담금 갈등 당시 주한미군 감축 찬성 여론이 급증했던 것은 한국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지지는 근본적으로 견고하지만, 한미 간 갈등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트럼프 행정부가 과도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인 주한미군 조정을 추진한다면, 한국 내 여론이 재차 변화할 가능성이 높음.
-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대미 접근: 일방적 증액 요구의 여론 악화 위험성을 전달하는 한편, 방위비 증액과 한국의 역할 증대가 추진될 경우, 이와 연계한 한국의 반대급부를 분명히 요구하고 확보해야 함.

≫ 대국민 접근: 불가피하게 방위비 증액이 발생할 경우, 이것이 한국 안보와 경제에 기여하는 전략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시적 성과로 입증함으로써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마. 확장억제 신뢰성 및 핵무장 여론

≫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대한 신뢰 약화와 전략적 대안의 부재는 대중의 안보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 지지 여론의 증가(2025년 76.2% 역대 최고)는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 하락에 따른 독자적 안보 역량 확보 요구로 이해할 수 있음.
- 특히 한미동맹 파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증가(37.2%→45%)하고, 주한미군보다 핵무기를 선택하는 응답자가 처음으로 과반에 근접(44.6%)한 것은 확장억제 신뢰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줌.

» 대미 접근: 핵무장 여론의 급증이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동맹 전략에 장기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공약의 가시적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야 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NCG 운영이 지속되기로 결정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정권 간 합의가 아닌 국가 간 약속임을 국민에게 인식시켜 안보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NCG 운영이 지속되기로 결정된 만큼,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확장억제 강화 조치가 일관되게 유지된다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정권 간 합의가 아닌 국가 간 약속임을 국민에게 인식시켜 안보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대국민 접근: 미국과의 핵 협력을 강화하고 이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재래식 전력 및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통한 독자적 억제력 보완으로 국민의 안보 불안을 완화시켜야 함.

바.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협력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높은 지지는 증대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책에 대한 지지로 이해할 수 있음.

- 트럼프 2기의 행보가 안전보장 공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지만, 미국 외에도 다른 전략적 파트너는 부재한 상황임.

일본도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세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국 간 대응 전략 공유의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한미일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 위협 및 트럼프 정부 대응에서 공조 강화가 필요함. 일본도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세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양국 간 대응 전략 공유의 실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대미 접근: 한미일 안보협력이 미국에게 ‘부담’이 아닌 인태 지역 안정화를 위한 ‘비용 분담’임을 어필하고, 핵심 광물·공급망·AI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적 실익을 강조하여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

≫ 대일 접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한미일 협력 체계 내에서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접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높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일본 내 정치적 변화나 한일 간 현안 발생 시에도 협력의 큰 틀을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요구됨.

CONTRARIA SUNT COMPLEMENTA

상반되는 것은 보완적인 것이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gray field with several large, overlapping circles. The circles are filled with a halftone pattern of small dots, creating a textured effect. The circles vary in opacity and size, with some appearing more prominent than others.

IFANS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